

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3-010-106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3. 6. 14.

## 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2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직원과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“보호법”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설립일자	주소	종업원 수	매출액('21년)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( )를 하였고,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1. 개인정보 처리 현황

피심인은 임직원( ) 및 담당자( )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버( )에 저장하였다.

### < 개인정보 처리 현황 >

구분	보유 항목	수집일	건수

피심인\*은 그룹( ) 자체「데이터 백업 내부계획」에 따라 재해·재난으로 데이터 분실 등 각종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 데이터를 암호화된 형태\*\*로 본사 서버( )에 백업하였다.

\* 피심인은 그룹의 자회사로서 본사와는 별개의 법인

\*\*

## 2. 개인정보 유출신고 개요

### 가. 사고 경위

미상의 자가 보안 취약점이 존재\*한 본사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하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, 시스템 관리 권한 계정 탈취, 랜섬웨어 공격 등을 수행하였고, 동 해킹 사건에 대한 그룹 자체 조사 과정에서 해커가 탈취한 계정으로 피심인의 백업 서버 침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나, 실제 해커가 백업 서버에 부정 접근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.

\*

\*\*

### 나. 경과 및 대응

일 시	인지·대응 내용	비 고

### 3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 관련

피심인은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재난·재해 대비 백업 목적으로 본사 서버에 이전하여 백업파일 보관 업무를 위탁하였으나, ①이와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, ②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.

#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 
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Ⅲ. 위법성 판단

### 1. 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 관련

#### 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
#### ※ 위·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

-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-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-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-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-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-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
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'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(위탁자)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

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수탁자)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백업 업무를 본사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는 **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**,

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**보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**.

### IV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·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4호·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2]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400만 원을 적용한다.

#### 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 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너.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4항제4호	200	400	800
더.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4항제5호	200	400	800
합 계		400		

## 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---

#### 1. 일반기준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

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, 시정조치(안)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였고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%를 감경한다.

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---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 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  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

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·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 원)	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(D=A+B-C)
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제1항	제 75조 제4항 제4호	200	-	100	100
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제2항	제 75조 제4항 제5호	200	-	100	100
총 계		400	-	200	200

※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제1항·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4항 제4호·제5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

2023년 6월 14일

위 원 장     고 학 수    (서 명)

부위원장     최 장 혁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강 정 화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고 성 학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백 대 용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서 종 식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염 홍 열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지 성 우    (서 명)